"위기의 국민의당 구원투수는 나"

천정배·정동영·문병호 당권경쟁…김한길도 고심

국민의당 광주시의원 9명 "제보조작 확인시 탈당"

국민의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7 전당대회에 하나둘씩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당권 경쟁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젊은 정치인의 도전을 통해 전대 구도가 좀 더 역동적으로 짜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지만 이 또한 재정부담 등 제한조건이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당권 후보 '빅4'로는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문병호 전 최고위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꼽힌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가장 먼저 전대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의 경쟁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도 16일 당권 도전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후 당이 어려워진 상황에 출마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조만간 결심을 공식으로 밝히고 비전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사실 우리당이 뭘 해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욕을 먹는 상황이다"며 "정치 생명을 걸고 당 위기를 이겨내는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문 전 최고위원도 조만간 전대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3의 길'이라는 당의 비전과 노선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김 전 대표도 당내 인사들로부터 출마 요청과 권유를 받고서 당권 도전에 뛰어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의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식 의원, 최경환 의원, 이동섭 의원, 정호준 비대위원, 박주원 경기도당 위원장, 김철근 구로갑 지역위원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이번 전대에서는 지난 5월 대선 패배 이후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까지 잇따른 악재를 타개할 당 쇄신 방안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야당 사이에 낀 '제3 대안정당'으로서 노선과 정체성을 좀더 분명히 당원과 국민에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새로운 인물들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 축 처진 당 분위기를 탈바꿈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재정부담과 당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전대에 5명 출마를 가정할 경우 1인당 3억원 수준의 기탁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전대 후보군이 정리되면 지도체제 변경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상 집단지도체제 방식이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려면 규정을 단일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전대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지원 전 대표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지도부를 뽑는 '임시전대'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도체제 변경을 위한 당헌 변경이 절차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국민의당 광주시의원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결과 중앙당의 사전 개입으로 기획된 사건이라면 국민의당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종 광주시의회 국민의당 대표의원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조영표, 문태환, 심철의, 박춘수, 김옥자, 이정현, 유정심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與野 공무원 증원·물 관리 일원화 놓고 힘겨루기

추경·정부조직법 내일 처리 합의

3野 "공무원 증원 재정 부담"

"수자원 환경부 이관 비효율적"

휴일 잊은 추경심사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민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16일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입장차가 커 막판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공무원 증원 놓고 여야 대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수정에 나선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경찰관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현장인력을 뽑는 것이라며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장기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향후 20~30년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공공기관 LED 교체와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등도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작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 3당은 또 가뭄대책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 예산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했다. 여기에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원 인상(1500억원, 한국당),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1250억원, 국민의당) 등도 야당의 요구사항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물관리 일원화가 쟁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다. 한국당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 기존에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오염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했을 때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일원화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수십 년간 해온 얘기이며, 지난 대선에서도 4개 정당이 물관리 통합 공약을 내세웠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또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반대한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는 찬성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경청을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19일 5당 대표 회동

한국당 홍준표 불참 의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 의사를 보이고 있어 반쪽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겸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안보 상황을 상호 공유하고, 심도 있게 여야 당 대표들과 협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6일 "주로 순방 결과를 듣는 입장이 되겠지만, 5대 인사원칙 훼손에 대한 유감표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도 당내 TF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청와대에 가서 할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외교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문 대통령이 청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곧 국익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참석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저들이 본부중대, 1·2·3중대를 데리고 국민 상대로 아무리 정치쇼를 벌여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개헌' 국민 목소리 듣는다

내달 말~9월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찬성 여론 75.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국민대토론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개헌특위는 우선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국가 원로와 각계 전문가가 분야별로 토론하는 '개헌이 미래다' 방송을 국회방송을 통해 방영한다.

다음달 말부터 9월 말까지는 광주·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그밖에 9월부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국민 개헌 자유 발언대'를 국회 안팎에 설치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개헌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번주 마지막 인사청문회 주간

19일까지 최종구 금융·박능후 복지·이효성 방통·백운규 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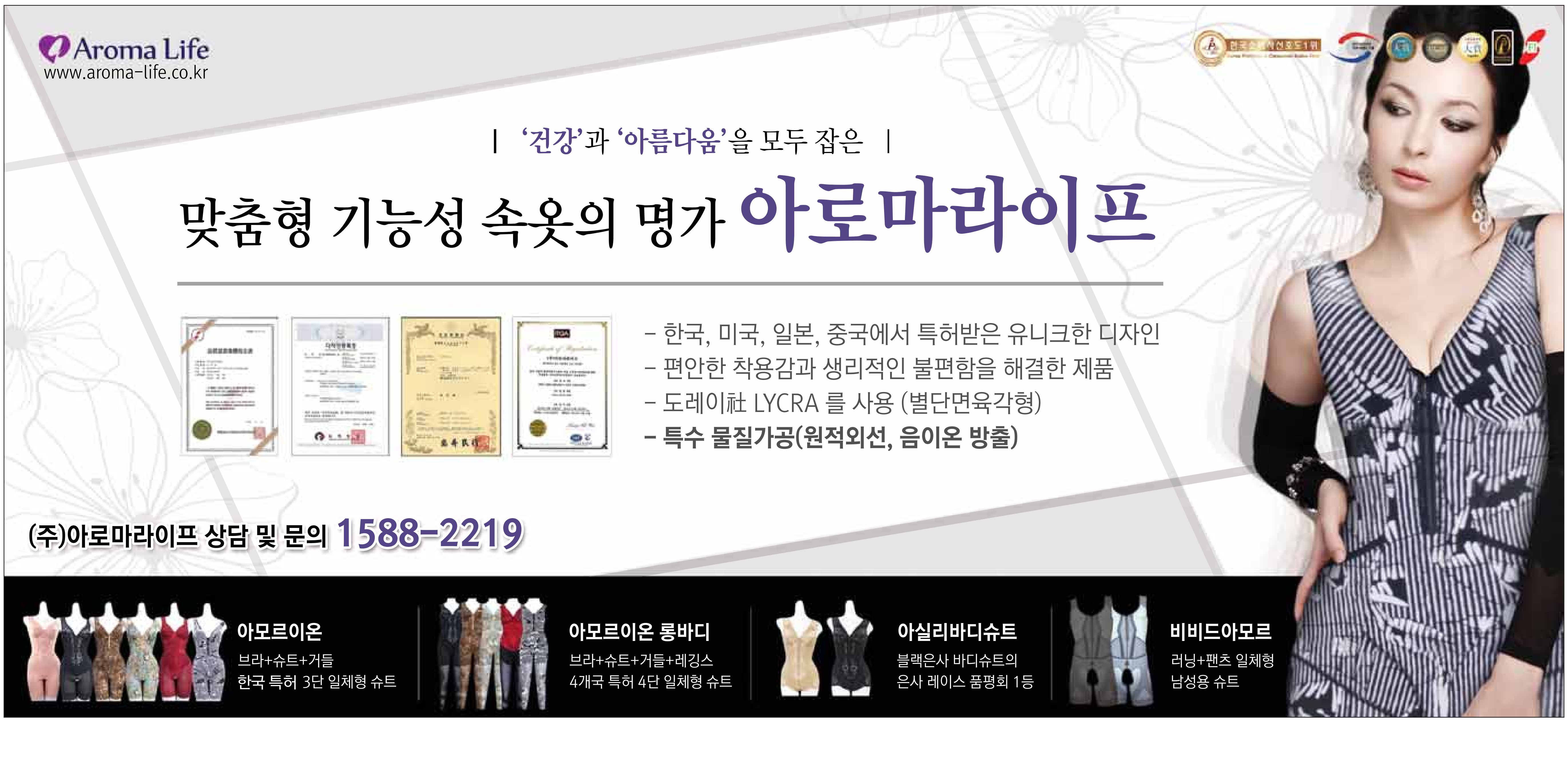
여야는 이번 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사를 검증하는 '파이널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여야는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상태다.

국회는 오는 17~19일 총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18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19일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박능후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소득세 '지각납부' 문제, 정부 출연 연구원에 재직하며 규정을 어기고 학위과정을 밟은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책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등 저출산·고령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백운규 후보자의 경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이효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방송개혁 방향 등에 대한 정책능력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후보자의 경우 가계부채 해결, 부실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정책문제에 청문회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